

산별노조 기반 흔들... 위기 맞은 민주노총

대법 "산하 지회, 기업별 노조 전환 가능" 판결 광주·전남 중소기업 노조들 움직임 촉각 민주노총 "노조 무력화 우려"... 25일 대책 논의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 산하의 지회·지부도 독립성이 있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산별노조 체제를 기반으로 조직을 키워 온 민주노총은 직격탄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산별노조에 가입해 있는 광주·전남 중소기업 노조들의 기업별 노조 전환 등 후폭풍도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산별노조 활동을 무력화시킬 장구를 열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지속적 "민주노총 흔들기"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9일 "기업노조로 전환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금속노조 발레오만도 지회장과 조합원 등 4명이 발레오

전장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관들은 8(파기 환송) 대 5(상고 기각)로 의견이 나뉘었다.

대법원은 지부·지회가 산별노조 하부조직이라는 원칙은 인정했지만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위원으로 활동해 근로자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사용자와 직접 단체 교섭·협약을 맺으며 기업노조 수준의 지위를 갖춰야 한다는 기존 판례보다 조직형태 변경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1995년 창립된 민주노총의 근간은 산별

노조 체제다. 민주노총 산하에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모두 16개 산별노조가 있으며,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 69만여명의 80%에 달하는 55만여명이 산별노조에 가입해 있다.

이번 판결 이전에도 민주노총 산별노조 체제의 기반이 흔들리는 조짐을 보였다.

최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광양시지부가 전국통합공무원노조(통공노)에 가입하려고 하자 전공노가 '조직변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지난 15일 광주지법 승선지원은 이를 기각했다. 전공노의 산하기구에 불과해 독립적으로 조직변경 결의를 할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전공노가 전공노 고흥군지부를 상대로 신청한 조직변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과 함께 정부의 민주노총 흔들기가 계속되면서 광주·전남 중·소규모 단위노조의 산별노조 탈퇴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산하에는 모두 1000여개 사업장에 150여개 단위노조가 10개 산별노조에 가입돼 있으며, 조합원은 3만 4000여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기차노조와 금호타이어 노조원 1만1000여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규모 단위노조다. 대기업 노조보다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약한 소규모 단위노조는 정부나 사측의 압박이 계속될 경우 기업노조로의 전환, 즉 '산별노조 탈퇴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오는 25일 예정된 정기대의원 회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광주본부 관계자는 "최근 노동개혁 양대지침과 함께 이번 사안이 타지면서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라며 "산별노조 탈퇴에 따른 사측과 정부의 노조 개입이 우려되기 때문에 추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난폭한 떠돌이 개 때문에... 광주교대 '때 아닌 공포'

가방·신발 등 물어뜯기 빈번 학생들 조 짜서 이동 등 불안 소방서 8차레 출동 포획 못해

광주교대 학생회에서 최근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유는 학생들이 불안에 떨게 하는 '떠돌이 개' 때문이었다.

지난해 말부터 학교에 나타나기 시작한 떠돌이 개가 학생들의 가방과 신발을 물어뜯는 사고가 잇따르자 학생회와 학교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한 것이다. 학생들은 행색이 초라하고 성격까지 나쁜 이 개에 일명 '거지왕'(사진)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거지왕'이 대학교 교정을 배회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1월, 수컷인 이 개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돌보던 또 다른 암컷 떠돌이 개 '가을이'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대학교 기숙사 주변을 거점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출몰하기 시작했다.

학생들도 처음에는 '가을이'의 남편이 나타났다면 관심을 보였다. 문제는 온순한 성격을 가진 '가을이'와 달리 '거지왕'이 다소 난폭한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

기숙사를 오가는 학생들의 가방과 신발을 물어뜯고 도망치는 사례가 잇따랐고,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개에 대한 공포 때문에 밤 늦은 시각에 조를 짜서 이동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더 난폭해지고 있다는 게 광주교대 학생들의 설명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학생들은 최근까지 광주북부소방서에 모두 8차례에 걸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런데 유독 이 개 앞에서는 소방대원들도 속수무책이었다. 개가 이상하게 소방대원만 나타나면 자취를 감추거나, 눈을 비비거나 도망치며 도망치기도 했다.

이 개가 잡지 못한 것이다. 심지어는 마취총을 맞고도 유유히 쫓겨나면서 학생들과 소방대원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다.

학교 측은 학생회의 요구에 따라 유견포획을 제작을 의뢰한 상태다. 광주교대 한수영 학생회장은 "주요 기숙사 건물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걷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포획망이 만들어지더라도 누가 직접 나서야 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광주북부소방서 관계자는 "거지왕은 잠잠 권으로 보이지만 워낙 빠르고, 움직임이 좋아 울무와 포획망으로는 잡기가 힘들고, 마취총도 관련법에 따라 독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며 "학생들과 의논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포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시공무원노조 전공노 가입 추진 정부와 갈등 예고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이 이른 바 범의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가입을 추진해 정부와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가 '범의노조' 가입을 위한 투표 등이 지방공무원법을 거스르는 위법행위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최근 공무원노조의 조직형태 변경과 관련한 협조 공문을 보내 전공노 가입을 목적으로 한 일체의 행위는 철저한 사전 차단과 사후 징계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행자부는 "비합법 단체인 전공노 가입을 위한 대의원대회, 투표 등 일체의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에 해당해 징계 및 형사처벌 대상인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광주시 공무원 노조는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조직형태변경 투표를 위한 총회 상정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광주시 공무원 노조는 앞서 2014년 1월에도 전공노 가입을 추진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정부 등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노조는 당시 투표를 강행했으며 정족수(과반수 투표) 미달로 무산됐다. 당시 투표율은 33%였다.

시 공무원 노조는 '시 공무원 노조와 시청 공무원 노조' 등 복수노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조합원 수는 각 1320명과 350명이다. 6급 이하 전체 가입 대상 공무원 1721명 중 97%가 가입해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휴일은 독서와 함께 21일 오후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문화관 내 영풍문고를 찾은 시민들이 마음에 드는 책을 읽으며 휴일 여가를 즐기고 있다.

21일 오후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문화관 내 영풍문고를 찾은 시민들이 마음에 드는 책을 읽으며 휴일 여가를 즐기고 있다.

21일 오후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문화관 내 영풍문고를 찾은 시민들이 마음에 드는 책을 읽으며 휴일 여가를 즐기고 있다.

"가정서 교화 필요"... 여동생 성폭행 지적장애인 집유

광주지법 형사11부 선고

범원이 교도소가 아닌 가정에서의 교화가 필요하다는 여동생을 성폭행한 지적장애인 오빠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우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지적장애 1급)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2세에 불과한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흥기로 어머니를 협박하고 추행하는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어머니(42)를 흥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장애학생 폭행 교사 벌금형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효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 A(여·45)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 초순에 지적·뇌병변장애 1급인 B(8)군이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졸고 있자, 양 손바닥으로 B군의 양 볼을 3~4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4월14일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애 2급 C(6)군의 양 볼을 때리는 등 총 6회에 걸쳐 B군과 C군을 학대·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체벌이라고 주장하지만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우울증 시름' 초등 여교사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전남지역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교사는 수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지만 이 같은 사실이 학교 등에 알려질 것을 우려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오후 4시45분께 광주시 북구 한 주택 2층에서 이 집에 사는 A(여·25)씨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A씨의 이웃(64)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전남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불 박학을 맞아 집에 머물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A씨의 어머니는 경찰에서 "딸이 5년 전부터 우울증이 있었고, 지난해 겨울부터 체세가 심해져 며칠 전부터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지병이 악화됐다"며 "3년째 교사로 근무하면서 우울증 치료 병력이 학교 측에 알려질 것을 걱정해 사실상 병원 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의 아버지도 7년 전 우울증을 앓다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국회의원 주민증 담긴 등기우편물 가져가 불 태운 70대

○...새누리당 이경현 의원 사무실에 입주한 건물 계단에서 이 의원의 주민등록증 등이 담긴 등기우편물 7개를 가져간 70대 노인이 경찰에 긴급체포.

○...21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김모(75)씨는 지난 18일 낮 12시 39분께 순천시 조래동 이 의원 사무실 건물 1층 계단에 있던 등기우편물을 가져간 혐의.

○...김씨는 경찰에서 "이 의원을 출가해서 고의 사무실에 들렀던 아무도 없었고 솔직히 계단에 있던 봉투를 들고 나왔고 집 앞에서 다른 쓰레기와 함께 불에 태워버렸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김씨가 범행 사실을 자백한데다 이 의원 측에서 '서울 사무실에서 보낸 것'으로 증명하지 않겠다고 밝혀 김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검인한 뒤 석방 조치.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고매각가격, 비고. Includes details for various properties being auctioned.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고매각가격, 비고. Includes details for various properties being auctioned.

● 고고한 부동산의 매각 표시는 실내용 다수건과 최저가 입찰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새누리당 이경현 의원 사무실에 입주한 건물 계단에서 이 의원의 주민등록증 등이 담긴 등기우편물 7개를 가져간 70대 노인이 경찰에 긴급체포.
○...21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김모(75)씨는 지난 18일 낮 12시 39분께 순천시 조래동 이 의원 사무실 건물 1층 계단에 있던 등기우편물을 가져간 혐의.